

인구절벽을 다문화로 해결할 수 있는가?



- 김선정
- 승인 2020.01.05 18:19
- 업데이트 2020.01.05 18:19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 프린트
-
- 메일보내기
-
- 글씨키우기

적극적인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필요

1. 인구절벽 문제 해결하려면 | 주택·보육·일자리...출산 늘릴 대책 시급 이민수용·생산성 향상으로 인력난 극복

- 정다운, 노승욱 기자
- 입력 : 2017.06.30 09:41:30
-



0



•



•



•



•



•



•



•



•



•



•



•



•



•



•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무려 100조원 가까이 투입했다. 하지만 단기 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출산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매년 감소하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 '비용 위주'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 정책과 출산 증진 정책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출산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다. 혼인율과 총 고용률, 주택 가격 등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지역의 전체 인구와 합계출산율, 출생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출산율 등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총 고용률과 혼인율이다. 총 고용률이 20%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출산율은 1.23에서 1.1로 하락했고, 총 고용률이 20% 올라가면 출산율은 1.39로 상승했다. 또 혼인율이 20%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은 1.15로 감소하는 반면, 혼인율이 20% 올라가면 합계출산율은 1.34로 오른다. 지가(땅값)변동률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가 변동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결국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 비정규직, 주택 가격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해 저출산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섭 교수도 "기존 저출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돕는데 힘썼다면 이제는 만혼(晩婚)과 비혼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보탰다. "고령화와 출산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최용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의 조언도 새겨들을 만하다.

합계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은 결국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노동력 감소는 심각한 경제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

숙련 근로자가 은퇴하고 신규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벽'을 넘으려면 정부가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민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특히 스웨덴은 '1000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기조를 유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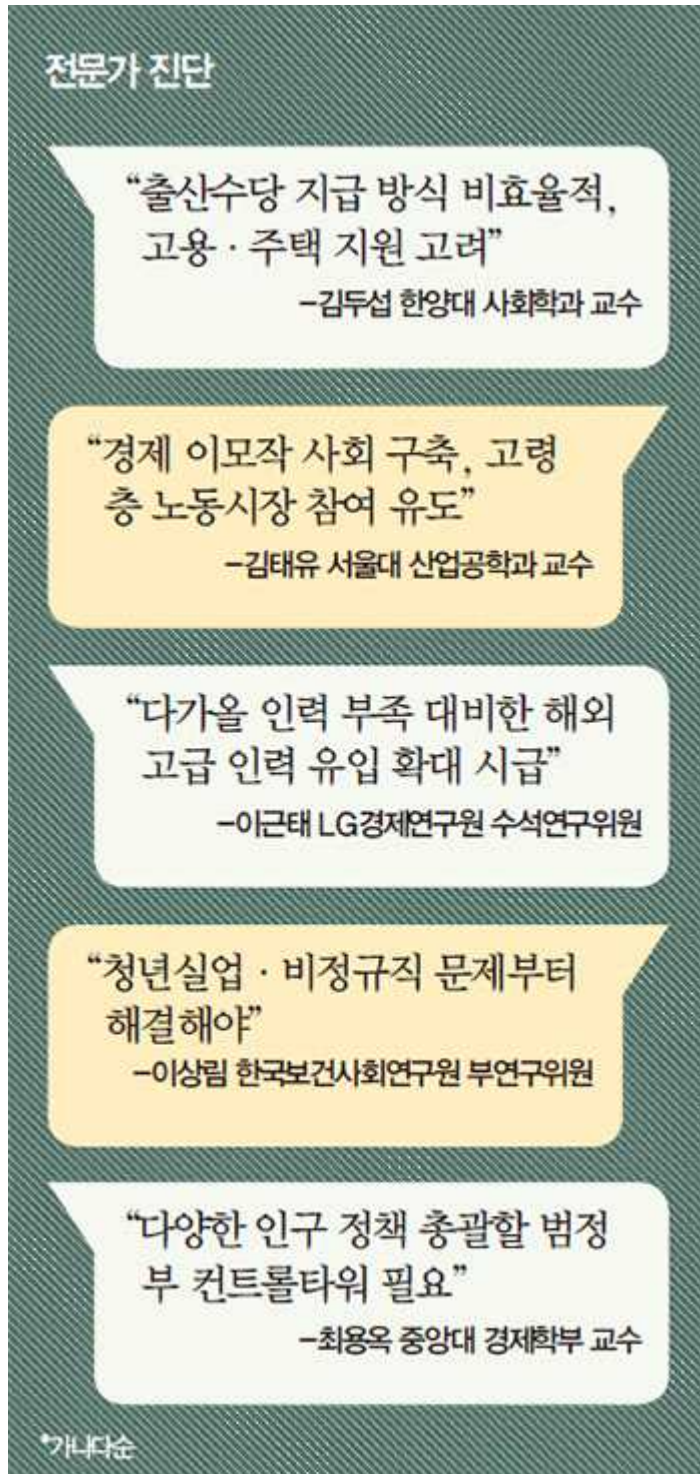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다가올 인력 부족에 대비해 청년 인력의 질을 높이고 해외 고급 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 우수 인력이 이민을 오도록 하면 부족한 노동력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이 언어장벽, 사회문화적 차별에 부딪혀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단일민족 개념이 강해 이민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이민 정책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2005년 프랑스 사회를 들쭉이게 한 이민자 폭동과 같은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전히 다문화를 배척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는 데에 적잖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노동인구의 1인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29.9달러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미국(56.9달러), 독일(50.9달러)은 물론 일본(36.2달러)보다도 한참 낮다. 부정적인 수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생산성을 올릴 여지가 충분하단 해석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한국 경제 생산성 제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능력 자체를 향상하는

방법이 첫째, 생산인구에서 소외된 고령층과 여성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게 두 번째다.



▶ 여성·노년층 노동시장 참여 유도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로 생산성 ↑

기술 고도화 측면에선 독일 사례를 본받을 만하다. 독일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공장 자동화 공정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생산 시스템 확보에 주력해왔다. 2011년부터 독일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정책도 궤를 같이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제조·서비스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세제와 규제를 정비하는 등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을 포기한 여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육아는 여성뿐 아니라 가정, 나아가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전업주부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회 인식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육아휴직 후 복귀 방안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를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고령층이 은퇴하기 전 다시금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는 '경제 이모작'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 이들이 우위를 갖고 있는 영업·법률·자문 등 지원 영역에서 활약할 만한 기반을 마련해주면 전체 생산성 확대에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령 계층을 단순히 부양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고려하면 오히려 잠재 생산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노년층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생산인구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생각이다.

인터뷰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절벽 인정하고 '다운사이징' 시작해야



“인구절벽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국내를 대표하는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는 “정책 마련에 앞서 인구 감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Q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A 줄어드는 인구에 비해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과잉공급돼 있다. 사회 전반에서 걸쳐 '다운사이징'에 나서야 한다. 다만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라는 얘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구조조정으로 학교 개수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60대 이상 노령인구가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식이다.

Q 기업 차원의 다운사이징 방법은 무엇일까.

A 연공서열제로는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 직원의 임금을 부담할 방법이 없다. 직급 간소화, 팀 중심의 업무, 주기적인 근로계약 갱신, 임금피크제 등이 다운사이징 차원에서 확산돼야 한다.

Q 정부는 어떤 식으로 나서야 할까.

A 인구절벽은 내수·노동·금융·세금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나 미래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의 주체를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전국 단위 계획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는 편이 낫다.

Q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방안은 없나.

A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은 일차원적 접근이다. 출산을 위해선 결혼을 해야 하고 그보다 먼저 고용과 거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지원 대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한단 얘기다. 저출산 정책을 투자와 회수의 차원에서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 투입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떨어지는 자잘한 정책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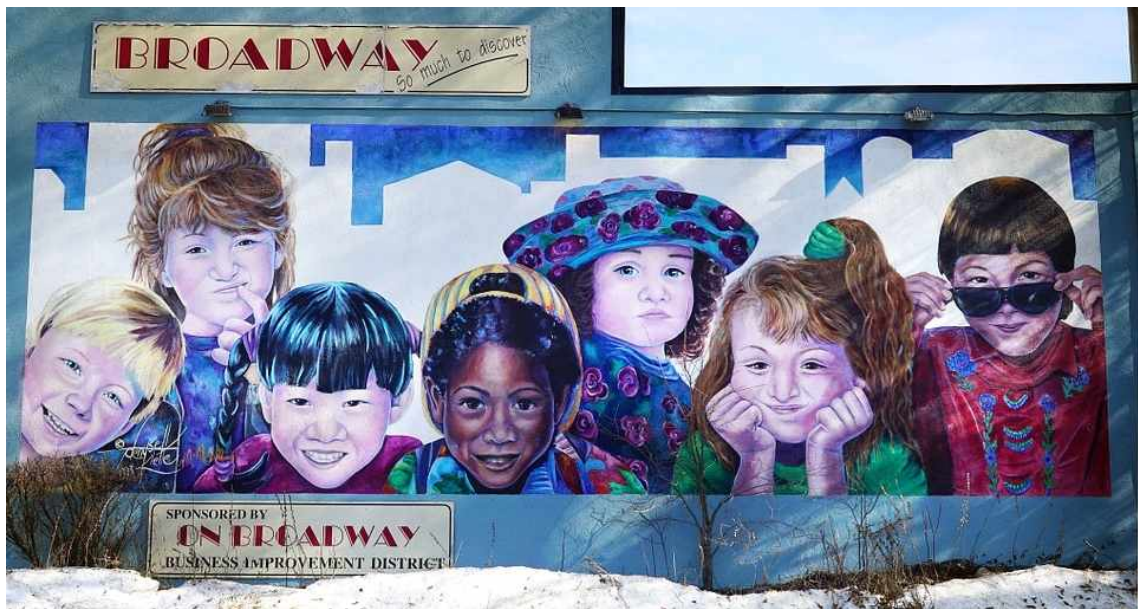
Q 이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A 이민 희망자를 국민이 아니라 그저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한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근래 들어 혼인 이주여성이나 조선족 유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구조에 비취 값싼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나건웅 기자 wasabi@mk.co.kr]

한국도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출처 : 픽사베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체류 외국인이 100 만 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 여성 비율의 증가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만성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6 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에 3,704 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4%를 넘어 한국도 마침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연금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의 성장 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 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2 명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는 그간 우려됐던 '인구 절벽'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인구 절벽이란 개념은 2014 년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자신의 책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에서 처음 제시하였다. 생산가능인구(15~64 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뜻하는데 협의로는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5~49 세 연령대가 아주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뜻에서 '인구 절벽'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소비를 많이 하는 40 대 중후반 인구가 줄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 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 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예정이다. 한편, 해리 덴트는 2015 년 10 월 제 16 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 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구절벽의 해결 방안으로 이민 촉진과 출산·육아 장려책을 제시한 바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맞물려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한 나라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심각한 인구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구절벽에서 올 수 있는 문제들 중 저출산문제, 산업현장 이민근로자

문제 및 경기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부동산 문제 등을 다문화(외국인 이민자)로 해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출산 현상

인구 절벽은 근본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저출산은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청년층의 취업률이 낮고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노동력은 과잉 공급되는 고령화 사회의 시장 구조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1년 4.54명으로 가장 높은 후 계속 낮아져 2016년에는 1.17명으로 추락하였으며, 이미 2002년 무렵부터 전 세계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출산율이 낮으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급감하고 있어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40만 명을 겨우 넘겼다. 이로 인해 2750년에는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67만 2843명으로 4만 1767명 감소, 중학교는 145만 7490명으로 12만 8461명이 감소하고, 고등학교도 175만 2467명으로 3만 580명이 줄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출생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와 달리 다문화학생은 9만 9186명으로 전체 학생의 1.7%를 차지해 10만 명에 가까워졌다.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2.8%, 중학생 1.0%, 고등학생 0.6%였고 베트남과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순으로 많았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 유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변화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현저히 증가하여 일반적 결혼형태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국제결혼이민가정에서 출생하는 자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다국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나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언어발달지체와 이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곤란 등의 문제를 겪기 쉽다.

만성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며,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정(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현재의 각종 사회보험과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해진다면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성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은 인구 절벽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 초반 인구 절벽 현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각종 산업이 쇠퇴하고 그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철강과 조선 산업을 유지했던 일본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져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선두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2015년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민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출산율도 떨어져 생산(노동)가능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하고, 2040년까지 경제 가능 인구가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른바 인구 절벽이다.

단기나 중기적 관점에서 노동이민은 경제적, 인구학적 변동에 기인한 노동력 부족 시점에 추가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거나, 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워 주는 특수 유형의 노동력이다. 따라서 이민은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게 해주며, 현재 또는 미래의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멸론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5개 군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 년~2018 년 전국 228 개 시·군·구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말하는 '소멸위험지수'는 20~39 세 여성인구를 65 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것이다. 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 즉 20~39 세 여성인구가 65 세 이상 고령인구보다 적은 상황이 되면 그 지역은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도 안되는 지역, 즉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감소로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 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 년 75 곳(32.9%)에서 올해 89 곳(39%)으로 증가했다. 충북에서는 농촌지역인 괴산·보은·단양·영동·옥천군 5 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경북 군위군의 65 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8788 명에 달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20~39 세 여성 인구는 1564 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줄어들어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늘었다고 한다.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가지고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을, 근린생활권 등 소지역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지역 연계를 통한 생활권·경제권 경쟁력 강화, 지역애착·애향심 제고 및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주거·육아·교육 등이 해결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론은 단지 예측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구절벽,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등의 유년층에서 그 수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데 이를 비유한 말이다.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미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현대문화 세미나 종강 기념. 맨 오른쪽이 필자.

한국인의 이민자 수용 태도

한국인의 외국인 이민자 수용에 대한 태도를 보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폐쇄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최근에 외국에 이민자에 대한 수용 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방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기회가



없었다고 본다. 중국은 14 억 4000 만 인구 중 한족이 절대다수인 93%를 차지하고 있지만 55 개의 소수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다민족 사회이고, 미국은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없지는 않지만 문화적 다원주의를 기본 태도로 하고 있다.

지구화의 확대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왜소했던 외국인 이민자들의 이웃으로의 인식 문제를 기본적으로 떠오르게 하고 있으며, 국제적 인구이동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이미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결정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이민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이민을 적극 수용하는 건 경제측면에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이민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 국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력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민자의 비율을 점차 늘려 국내 생산인구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이 가져올 경제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민정책이 그 대안이라면 좀 더 섬세한 대책과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경기 활성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기계를 위해서 출산율 장려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젊은이들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기댈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기고가>

Tag

#인구 절벽#다문화사회#지방소멸

1) 인구재앙 고속도로에 올라탄 대한민국..백약이 무효인가

김종현 입력 2021. 01. 04. 06:00 수정 2021. 01. 04. 16:23 댓글 4684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5천만 인구가 2천5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생산 인력도, 학생도,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한 40년 후인 2060년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마주할 현실이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이런 인구재앙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8명 감소했다. 우리 현대사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시골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다.

작년에 출생자는 27만5천815명으로 10.7%(3만2천882명)나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30만7천764명으로 3.1%(9천269명)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출생 감소는 아찔할 정도다. 2017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30만명 선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40만명 선은 15년간 유지됐으나 30만명 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래픽] 2011~2020년 주민등록 인구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작년 1분기 0.90명, 2분기와 3분기 0.84명이었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 평균(2.4명)이나 복지국가가 많은 유럽연합(EU) 국가의 평균(1.59명)과 너무 차이가 크다.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젊은 층이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연구진은 코로나가 몰고 온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혼인과 임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비대면 생활 방식 확산과 경쟁 환경 심화 등도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11~2020년 주민등록 인구 추이



출생·사망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YONHAP NEWS 연합뉴스

김계리 인턴 / 20210103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YN1

[그래픽] 합계출산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84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05명 줄면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가임여성 1명당 기준)



자료/통계청

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0201125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yoony2@yna.co.kr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한경연은 작년 7월 보고서에서 40년 후인 2060년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 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40년 후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한 명을 떠받쳐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작년 12월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월 30만원,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출산 땀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해 300만원을,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1천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올해 36조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준비했다"고 했다.

하지만 돈으로 무너진 출산율을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얽힌 원인에 따른 총체적인 결과로, 문제의 일면만 보고 세우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아동, 청년, 은퇴 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4차 기본계획의 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학 전문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관련 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성공에 대한 경쟁 일변도의 획일적 가치관, 인구 자원의 서울·수도권 집중 등 근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세를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0
0
0

2)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작년 사상 첫 인구 감소...출생 27 만-사망 30 만명
'데드크로스' | 연합뉴스
- [외국인 수용책 이대로 좋은가] ② 선진국 인구절벽
극복사례는 | 연합뉴스
- [인구재앙] ① "아이 울음 끊겼다"...전국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기 | 연합뉴스
- [인구재앙] ② "존립위기 극복"...지자체마다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 연합뉴스
- [인구재앙] ③ [르포] '과자 봉지 변색할까' 신문지 덮어둔
시골상점(끝) | 연합뉴스
- 2년 전 음주운전 배우 사망 사건...방조 혐의 남편 불기소 |
연합뉴스
- 서울 시청역 앞에서 칼부림한 노숙인 검거 | 연합뉴스
-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 연합뉴스
- '평양살이 2년' 영국인이 경험한 북한 보통 사람[연통 TV] |
연합뉴스
- 중국서 어린 소녀 돌연 탈모...알고보니 '고양이 때문' |
연합뉴스

다음 뉴스가 언론사 선택 기능을 제공합니다.

댓글 MY

로그인 해주세요.

세이프봇 설정
설정 버튼

- 추천댓글도움말
- 찬반순
- 최신순
- 과거순

페르시아블루 2021. 01. 04. 06:37

출산률 관련 공무원들 다 자르고 그 돈과 배정된 예산을 애낳은 부모한테 나눠 줘. 십년 넘게 출산정책 한다고 몇백조 들이는거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으니 차라리 부모에게 직접 줘라~~~!!!

답글32댓글찬성하기2355댓글비추하기112

기차길옆 2021. 01. 04. 08:41

한국 영토의 100배인 캐나다 인구가 3774만명이다. 한국은 좁쌀만한데 인구가 너무 많다. 2500~3000만 정도가 적당하다. 아직도 27만명이나 태어나다니 정신 못차렸다. 빨리 10만명 대로 진입해야 한다. 인구가 적정해야 정치꾼들이 사람 귀한 줄 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일자리나 인권을 극진히 챙기는 기레기들이 뭘 인구 걱정이야? 이 나라는 서민 다문화만 주구장창 선동할게 아니라 언론부터 외국인과 조선족을 채용하고 체육계는 귀화선수 뽑아 다문화하고 방송계도 외국인들을 많이 출연시켜 다문화해야 기득권이 타파된다.

답글 작성댓글찬성하기16댓글비추하기5

퀵카 2021. 01. 04. 07:14

이러면 아파트도 반토막 나겠지 입주할 사람이없으니

답글49